

5·18민주화운동 39주년 특별판 요약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 이영제

들어가며

39년 만에 5·18 당시 신군부, 정확하게 전두환의 역할과 5·18이 어떻게 은폐, 조작되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를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역사적 작업은 ‘사법적 응징’과 ‘희생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5·18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의 원인과 양상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곡의 원인: 역사적 처벌의 불철저성

5·18 민주화운동은 일상적인 왜곡과 폄훼에 시달려 왔다. 그 원인은 가해 당사자들에 의한 사건기록의 인멸과 증거조작, 정치권에 의한 끊임없는 왜곡의 동원, 온라인과 SNS의 발전에 따른 익명성과 편향적 자료를 맞춤형으로 끊임없이 제공하는 협송(narrowcasting)의 강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불만의 증대 등 다양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역사적 처벌’의 불철저성이다.

가해자 없는 역사와 왜곡의 악순환: 양상과 문제

1) 불완전한 화해조치에 따른 가해자의 익명화와 피해의 일방화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였고 국가폭력에 대한 기록은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졌다. 이것은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왜곡과 폄훼, 또 다른 왜곡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2) ‘가해의 과거화’와 ‘희생의 선택지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기록의 부재라는 ‘반성 없는 화해’는 국가폭력을 이미 과거의 문제로 제한하게 만듦으로써 현재와 미래와의 역사적 단절을 초래했다.

3) 가해 사실의 인멸: 역사 지우기

가해자에 가해 공간에 대한 철저한 기록의 부재는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의 국가폭력에 대한 증거인멸로 이어지고 있다.

4)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도: 민주화의 주체 바꾸기

자신이 민주화의 주인공이라며 진행한 전두환·노태우의 6·29 선언 주도 논쟁은 이제 ‘6·29선언’이 민주화의 출발점이라는 ‘6·29 민주화선언’으로 왜곡되어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민주화 가치의 보편화가 대안

1)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기록이 해결의 출발점

‘국가폭력 관련 기록 등 보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국가의 국가폭력의 공간과 관련 자료들에 대한 보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멸실과 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2) 국가폭력 장소의 기념박물관화

살아있는 가해세력의 역사적 장소 훼손과 역사 지우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함하여 시민의 일상을 규율하고 통제했던 국가폭력 시설이 시민의 일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이자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3) 보편적 가치를 지닌 현재의 운동으로의 발전

왜곡과 폄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특정 지역과 세대, 세력적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해당 민주화운동이 갖고있는 적극적 가치를 연결하고 확대함으로써 보편적인 가치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인권가치의 보편화와 현재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가해자에 대한 기록과 유실되고 있는 국가폭력 공간에 대한 적극적 보존과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기념박물관화,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보편적 가치를 지닌 현재와 미래의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법률적 처벌을 넘어 영구적인 역사적 처벌의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